

# 농식품부, 빵·우유 등 물가 잡는다

## 28개 품목별 담당자가 '밀착 관리'

### 비상경제·물가관계장관회의

농식품부, '농식품 수급상황실' 차관 직속으로 격상해 엄중 관리  
농축산물 외 9개 가공식품 추가 물가 상시점검·안정 선제 대응 모색

정부가 장비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농식품 물가 관리를 직접 챙기고, 특히, 물가 체감도가 높은 빵이나 우유, 과자 등 9개 가공식품별 담당자를 신규로 지정해 밀착 관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물가안정책임관인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결 물가 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소관 품목 물가 안정을 책임지고 현장 중심 물가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다.

농식품부는 올해 6월부터 국제 원자재가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정책실장을 상할실장으로 운영중인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이번엔 차관 직속으로 격상해 농식품 물가를 보다 엄중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는 신선 농축산물 외 가공식품도 물가 체감도가 높은 빵, 우



우유 원재료인 원유(原乳) 가격 상승으로 인해 흰우유, 발효유, 가공우유 등 유제품 가격이 연달아 오르고 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우유를 재료로 하는 빵·과자·아이스크림 등의 제품 가격도 연쇄적으로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3일 서울 소재 유통매장에서 각종 유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유, 스낵과자, 커피, 라면, 아이스크림, 설탕, 식용유, 밀가루 등 9개 품목을 중심으로 사무관급 담당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이들 품목을 포함해 농식품부가 전담자를 지정해 관리하는 품목은 28개로 늘었다. 각 품목별 담당자는 소비자단체·업계와 소통 체계를 가동해 물가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차관을 중심으로 농식품 수급상황실과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물가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장·차관 중심 현장 점검과 소비자·업계 소통을 강화해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훈 차관은 회의에서 "농축산물 가격은 10월 하순 이후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기상 악화 및 가축전염병 발생 등이 변수"라며 "가공식품·외식도 연말까지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으나 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농식품부 차관인 저를 물가안정책임관으로 하고 그동안 식량정책실장이 운영하던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차관 직속으로 격상해 농식품 물가를 보다 엄중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우선 물가 체감도가 높은 28개 농식품 품목에 대해 전담자를 지정해 중점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권익위,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개선 권고

보도-횡단보도 경계턱 낮추고  
점자블록 설치장소·방법 재정비

교통약자 안전을 위해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경계턱이 횡단보도 쪽에 맞춰 낮추고, 지하도·육교 입구 등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에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으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용이동장치가 대중화되며 특히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높은 경계턱, 미비한 점자블록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횡단보도 경계턱 관련 사고 접수 민원은 3805건, 점자블록 관련 사고는 4129건에 이른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통해 교통약자의 보도 통행 시 주된 불편 원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

련했다.

'횡단보도 전체 턱 낮춤 설치 기준'이 있었으나 지난해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기준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으로 일원화되는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 때문에 좁은 경계턱 낮춤 구간이 휠체어나 키보드 등이 집중되는 병목현상으로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경계턱을 횡단보도 쪽에 맞춰 낮추고, 횡단보도 경계턱 낮춤 최소 유효폭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보도 위 점자블록 설치장소·방법을 재정비해 점자블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하도·육교 입구, 차량 진출입 구간 등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에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점자블록과 보도의 다른 시설물 및 지장물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기재부

## 내년부터 다국적기업에 '최저한세' 시행

국제조세조정 개정안 입법 예고

다국적기업 등의 조세 회피에 대응하고자 세계 주요국이 합의한 글로벌 최저한세가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9일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에 앞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될 시 다른 국가에 추가로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경제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은 이 같은 내용에 합

의한 바 있다. 현재 140여개 국가이 행체계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국가 간 조세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적용대상은 연결 재무제표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1조 원가량)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이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 200여 곳이 해당될 전망이다. 과세액은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 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로 과세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산업부, '위법 주유소' 내달부터 공개

석유가격 안정 위해 6000곳 점검  
오피넷, 저렴한 주유소 정보 제공  
부정수급 등도 앱 지도에 공개 계획

정부가 주유소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전국 6000곳 이상 주유소를 점검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를 한 주유소 정보는 내달부터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통해 공개된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9일 오후 서울에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업계·기관과 함께 석유 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 회의는 12월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실효성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주유소 현장 점검 실시현황을 살피는 등 석유가격 안정 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유4사와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가 참석했다.

중동정세 불안으로 급등했던 국제유가는 11월 들어 지난 7월 수준인 배럴당 80달러 초반대로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 또한 4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민 물가 부담은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이다.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4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기준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L)당 1745.8원으로 전주 대비 17.8원 하락했다. 경유는 전주 대비 8.6원 떨어진 1675.9원으로 집계됐다. 5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휴게소 내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국민들의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12월까지 추가 연장했다.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25%(205원), 경유는 37%(250원) 내렸다.

아울러,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운영하며 가격안정 정책 실효성을 점검 중이다. 또 주유소 가격·품질 특별 점검을 통해 지금까지 약 3000개 이상 주유소를 점검했고, 연말까지 총 6000개 이상의 주유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오피넷 사이트와 앱을 통해 경로별, 지역별, 고속도로별로 가격이 낮은 주유소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고 있고, 12월부터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 주유소 정보를 앱 지도에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한-UAE(아랍에미리트)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타결(10월 14일)에 따라 내년부터 UAE에서 수입되는 원유에 대한 관세가 인하돼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만큼 정부는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정유업체도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나라살림 적자 70兆... 총수입 50兆 줄어

올 1월~9월 기준 발표

올해 들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0조 원을 넘어섰다. 국제수입이 전년보다 50조 원 넘게 줄면서 정부가 전망한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2조 원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1~9월 누계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조9000억 원 감소한 436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제수입과 세외수입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총지출'은 68조5000억 원 줄어든 467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예산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및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22조3000억 원 감소했다. 기금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5조7000억 원 감소했다.

이로써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가 31조20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9조4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 원의 적자를 보였다. 전월과 비교해 4조6000억 원 만큼 악화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살림살이를 가능하는 지표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 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8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당초 예측치에 비해 12조4000억 원 더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월 세입·세출 여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가 계속 바뀐다"며 "현재로서는 연말 관리재정수지 악화 또는 개선을 확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